

# 남북대화의 진행

## V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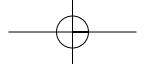
제1절 정치분야 회담

제2절 군사분야 회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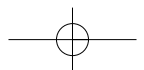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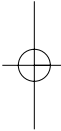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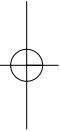
제3절 경제분야 회담

제4절 인도·사회문화 분야 회담

2006년의 남북대화는 2005년부터 확대되어온 남북대화의 기초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져왔으나, 하반기 상황으로 남북대화의 여건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간 판문점 및 군당국간 연락채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상황관리 노력을 지속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 VII

## 남북대화의 진행

2006년의 남북대화는 2005년도부터 확대되어 온 남북대화의 기초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어져 정치분야 5회, 군사분야 4회, 경제분야 8회, 인도·사회문화 분야 6회 등 총 23차례 개최되었다.

정치분야에서는 2006년 4월에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문제제기로 당초 일정보다 연기되어 개최되었으나,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 과거청산·인도주의 문제 실천, 남북협력의 저변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이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에 동의함에 따라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5월에 진행되었다.

군사분야에서는 2004년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2일 부터 4일까지 통일각에서,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5월 16일에서 18일간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어,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문제와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경제분야에서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어 한강하구 골재채취,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경제 및 자원개발

분야에서의 제3국 공동진출 등 호혜적 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갔다.

인도·사회 분야에서는 2월 21일 부터 23일 까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상봉 확대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안중근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등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함으로써 남북대화의 여건이 일순간에 악화되었다. 미사일발사 직후 7월11일 부터 13일 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력히 설득하였으나, 상호 입장차이로 회담은 조기종료되었다.

또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남북간 판문점 및 군당국간 연락채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등 상황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8월의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한 실무접촉, 10월의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 11월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등의 남북대화도 계속 추진해 나갔다.

남북회담개최현황 (2001년~2006년)

구 분		합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 계		161	8	33	38	25	34	23
정치 분야 (28건)	남북장관급회담	15	2	2	4	2	3	2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1		1				
	남북차관급회담	1					1	
	특사파견	3		1	1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4					3	1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2					2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2						2
군사 분야 (34건)	남북군사실무회담·수석대표접촉	8	2	3	2			1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4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수석대표접촉	7				3	3	1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 분야 (66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급접촉	13		2	4	2	4	1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					1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4					1	3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5		1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12		3	5	2		2
	임남댐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2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5		2	1	1	1	
	남북해운협력협의회	1					1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1					1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1					1	

경제 분야 (66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사회 문화 인도 분야 (33건)	남북적십자회담	5	1	1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5		2	1	1		1
	대북 수해복구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1						1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3					3	
	금강산면회소건설 비공개접촉	2			2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					1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2					2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3					1	2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	3					2	1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 제1절 정치분야 회담

2006년에는 2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였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에 의해 연기되어 개최되었던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2006.4.21~24)에서는 초반 남북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5년 활성화된 남북대화의 기조를 이어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7.11~13)에서는 쌍방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회담을 조기 종료하였다.

남북장관급회담 이외에도 정치분야에서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실무접촉(2006.5.23), 2차례에 걸친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 실무접촉(1차 : 5.16~17, 2차 : 5.29)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 1. 남북장관급회담

#### 가.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8차 장관급회담은 당초 2006년 3월 28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을 이유로 연기를 통보해 옴으로써 예정된 날짜에 개최되지 못하고 20여일 연기된 4월 21일부터 24일 동안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종석(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실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주동찬(민경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부국장) 전중수(조평통 부장)

우리측은 2006년도에 열리는 첫 번째 고위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과 한반도 평화 및 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데 목표를 두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상호 호혜적 경협구조 창출, 인도주의 문제의 실질적 해결, 새로운 사업을 통한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의했다. 6자회담 재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장성급 군사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여 서해 공동어로 등 평화정착 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또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강하구 골재채취, 함경남도 단천지역의 민족공동 자원개발 특구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남북간 상호 호혜적인 경협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분단이 초래한 불행한 과



거를 청산하고 민족 화해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남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우편물·영상물 교환 등을 통한 상봉기회의 확대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항의하고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외세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낮은 대결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관습, 제도적 장벽들을 제거’ 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대측 참관지 자유방문 허용, 모든 합동군사연습 완전 중지, 지역·업종·규모에서 제한없는 투자와 경제협력을 실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6.15를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지정하고 오는 6.15 공동선언 6주년 행사에 남북당국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독도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한 끝에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과 호혜적 경험 확대 및 인도적 문제 해결 등 8개항의 합의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였다.

회담 초기 북한은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 존중,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의 끈질긴 설득으로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남북 공동의 이익이 되는 경험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리 측이 제기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공동자원 개발 등에 대해 북측은 공감을 표시하였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등과 관련해서도 이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데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은 김영남씨 문제와 관련된 우리 측의 확인요청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실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증진
2.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취해 나가야 한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실현을 위해 협력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며 『9.19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이익과 안전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4. 민족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며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남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하여 민족적 행사를 의의 있게 진행
5. 경제분야에서 민족공동 번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협력을 실현
  -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며 공동의 번영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 아래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역과 업종, 규모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천적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당면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5월 중 개최하여 한강 하구 골재채취 문제, 민족 공동 자원개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열차 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문제, 개성공단건설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문제 등을 협의
6.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
7. 자연재해 방지, 보건 의료, 문화유적 보존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8. 제19차 장관급회담을 '06.7.11~14까지 부산에서 개최

## 나.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된 회담이었다. 8개월째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하여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예정된 날짜에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측은 회담 개최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정세가 어려울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입장을 북한에 분명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은 7월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측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핵심의제로 삼고, 이 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회담에 임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이종석(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유진룡(문화관광부 차관) 이관세(통일부 실장) 유형호(통일부 국장)	주동찬(민정협 부위원장) 박진식(내각 참사) 맹경일(조평통 부국장) 전중수(조평통 부장)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강한 유감과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진전되고 있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봉착했고 남북 화해협력을 지지하던 국내 여론이 악화되었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여론 또한 도전을 받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6자회담 복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이를 통해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만약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보다 엄중해질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였다.

한편, 북한은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남북관계 발전과 정세를 위협

하는 제반요인들을 제거해 나가자고 하면서 성지·명소·참관지 제한 철폐, 합동군사훈련 완전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여러 차례의 수석대표 및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서도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좁혀지지 않자 북한은 회담의 조기 종결을 제의하였고, 우리측도 쌍방간의 입장 차이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논쟁만 반복하기보다는 회담을 종결하는 것이 상황에 부합한다고 판단, 북한의 제의를 받아들여 공동보도문 합의없이 회담을 조기종료하였다.

## 2. 6.15 남북공동행사 당국간 실무접촉

6.15공동선언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당국 대표단이 적극 참가한다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광주에서 열리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6년 5월 23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남북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표단의 규모는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로 하고, 대축전 기간 중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되 당국대표단간 공동기념행사 등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일정 관련 세부사항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하기로 하고, 6개항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남중(통일부 과장)	황철(내각사무국 과장)
대 표	백원필(통일부 사무관) 김혜경(통일부 사무관)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리영국(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원)

##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작년 8.15 민족대축전 때와 같은 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 정도의 당국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
2. 북한 당국대표단의 남한 지역 체류기간은 2006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확정
3. 쌍방 당국대표단은 대축전기간 중 민간급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기본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국대표단간 공동기념행사 등을 진행
- 4 기타 왕래절차,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등 실무적 문제들은 지난 해 공동행사의 관례에 따름.

## 3.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실무접촉

2005년 8월 15일 남북공동행사시 북한 당국 대표단장으로 서울에 왔던 김기남 당비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방북 초청의사를 전달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6년 4월 중·하순경 방북 희망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 같은 입장을 북한에 전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측은 방북과 관련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방북시기를 6월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2월 20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4월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6월중 방북에 동의” 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방북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차례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측에서는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장이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여하였다.

## 가. 1차 실무접촉(5.16-17, 금강산호텔)

1차 실무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방북시기는 6월 하순 3박 4일 일정으로 하고, 방북단은 특별수행원, 경호·의

전·의료지원단, 정부지원단, 기자단 등으로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2차 실무접촉은 5월 29일 개성에서 갖기로 하였다.

#### 나. 2차 실무접촉(5.29, 개성 자남산 여관)

2차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1차 접촉시 제기사항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방북 경로 및 방북단 규모 등 주요 쟁점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협의 결과,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육로를 통해 평양을 방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구체적인 방북경로, 방북단 규모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차기 접촉을 갖고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2차 접촉 후 6월14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된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기간 중 우리 측 정세현 수석대표와 북한 관계자 사이에 동 문제와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확답을 미룸으로써 쟁점사항이 합의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정세변화가 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측이 “돌출상황 때문에 지난 5월달에 합의했던 6월말 방북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방북 연기 결정을 6월 21일 공식 발표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을 위한 협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 제2절 군사분야 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05.12.13-16)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과 북은 2월 3일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 회담 수석대표접촉을 개최하여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이후 1년 9개월여만에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3월2일에서 3일까지 통일각에서 개최되었고 이어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평화의 집에서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었다.

두 차례의 장성급군사회담에서 우리측은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수역 설정, 경협외의 군사적 보장문제 등을 중점 협의의제로 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갔으나, 북한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우선 확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의를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었다.

###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및 실무회담

####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이 2월3일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문성묵 국방부 대령이, 북한측에서는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의 의제, 개최일자,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였다. 회담의 의제는 서해상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회담장소와 개최일자에 있어 의견차이가 있었다.

회담장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5년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북한은 현지시설 등 여건문제를 이유로 백두산 개최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회담 개최일자도 3월말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회담장소 변경 제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여 수용하였으나, 회담 개최일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당국간 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므로 2월 중순 경으로 개최일자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쌍방은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이틀간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전화통지문을 통해 확정하기로 하였다.

#### 나.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2.3, 판문점 통일각) 이후, 남북 쌍방 군사당국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3월 2일부터 3일까지 판문점 북한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제2차 장성급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개선조치를 제시하고,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철도·도로를 이용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과 제2차 국방장관

회담개최 문제 협의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서해상 무력충돌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도 서해해상군사분계선 확정 문제와 함께 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쌍방은 공동어로 실시, 충돌방지 개선 등 서해상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공통된 인식을 가졌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담을 종료하였다.

#### 다.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5월초 우리측이 제4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이 회담개최에 동의함에 따라,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한민구 (국방부 소장)	김영철(인민무력부 중장)
대 표	문성묵(국방부 대령) 김형수(국방부 대령) 심용창(통일부 과장) 엄현성(국방부 대령)	리형선(인민무력부 대좌) 오명철(인민무력부 대좌) 배경삼(인민무력부 상좌)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우리측은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5월 25일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문제를 우선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회담에서 제기한 서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개선조치와 공동어로수역 설정문제 등 서해평화정착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한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남북이 관할하여온 수역과 그 기준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존중·준수하고 남북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지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와 같이, 서해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였고,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는 실무적인 문제로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없이 회담을 종료하였다.

## 2.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

북한은 2006년 9월 28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간에 이미 이룩한 군사적 합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 하기 위해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접촉을 10월 2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질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에서는 문성묵 국방부 대령이, 북한측에서는 박기용 인민무력부 상좌가 수석대표로 회담에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북한은 우리측이 장성급군사회담 합의를 위반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통행질서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우리측은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이미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통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임진강 수해방지 등 경

협사업의 군사보장 조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열차시험운행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서 군사보장합의서의 채택 문제가 우선적으로 협의되어야 함을 촉구하였다.

### 제3절 경제분야 회담

경제분야에서는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총 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제12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 경의선,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의 태도변화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같은 호혜적 성격의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한편, 과학기술협력, 자연재해 공동방지, 제3국 공동진출 등 실질 협력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실무회담의 개최에도 합의하였다.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실무접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세 차례의 위원급 실무접촉에서는 열차시험운행 실시와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이 주된 협의과제였다.

##### 가.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2005년 11월 제1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남과 북은 협의 중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서면협의를 통해 합의서안을 조율하였다. 이후 북한의 제안에 따라 2006년 1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남과 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쟁점인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에 대해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상호 이견을 좁히기는 어려웠다.

이외에도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개최,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수산협력사업 등 진행 중인 경험사업과 필요한 군사적 보장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문서교환 방식 또는 추가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나.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남과 북은 2006년 4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과 협의안건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제의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본회의 개최 전에 제3차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이 5월 3일부터 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북한은 먼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타결하고, 열차시험운행을 비롯한 철도·도로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지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반면, 우리측은 이번 회담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이전에 개최되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가진 만큼, 한강 하구 골재채취, 자원개발 특구,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개성공단 개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협력 현안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측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와 관련,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 및 상환방식에 대해서는 유무상통의 원칙이 지켜줘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였다.

한편, 북한도 경공업 원자재 제공규모와 상환방식,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해 보다 진전된 입장 없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다 결국 동 실무접촉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 다.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이후 개최된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에서는 그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던 열차시험운행을 2006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은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을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성의 남북경협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남북은 동 접촉에서 열차시험운행 행사계획,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일정 및 장소 문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열차시험운행은 기념행사를 5월 25일 문산역과 금강산역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주빈은 장관급으로 하고, 참석자 규모는 총 500명으로 합의하였다. 경의선에는 우리측 통일부장관(이종석)과 북한측 장관급회담 단장(권호웅)이 참석하고, 동해선에는 우리 측 건설교통부장관(추병직)이 북한측 철도상(김용삼)이 참석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의 제공규모, 상환방식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며, 최종 합의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2006년 5월 25일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은 북한측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무산되었다. 이에 우리측은 5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 북한의 일방적인 처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측은 북한의 정확한 의도 파악하고 열차시험운행에 관한 우리측의 확고한 입장 전달할 필요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 경제분야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6년 6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에 서 개최하였다.

동 회담에서 남북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열차시험운행 문제에 대

해서 진지하게 협의하였으며, 쌍방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개항의 합의를 채택하고, 제4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우리측은 무엇보다 열차시험운행 연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민족공동 자원개발, 개성공단 건설 등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분야 현안과 관련하여 세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실무회담의 추진일정도 협의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주동찬(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김천식(통일부 남북경제협력국장) 나도성(산업자원부 무역유통심의관) 원인희(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강계두(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권영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리영석(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북한은 회담기간 내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였다. 그렇지만 열차시험 운행 연기와 관련하여 우리측에 대해 서해 NLL 문제협의를 호응하고, 상대방의 사상 및 체제모독을 중지하며, 군사적 보장을 위한 결실 있는 경협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개통식 일정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였고, 회담기간 내내 동 문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반면, 북한은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를 우선 채택, 발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실시’와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효를 조건부로 연계하여 최종 합의를 채택하였다. 쌍방은 6월 6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합의를 서명·채택하고,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합의서」도 최종 서명하였다.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문 요지

1.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를 조건이 조성되는데 따라 발효
2.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3. 제2차 개성공단 실무접촉(6.20-21, 개성)을 개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및 숙소 문제 등 협의
4. 제1차 임진강 수방 실무접촉(6.26-27, 개성)을 개최, 공동조사 방법 등 협의
5. 자연재해 공동 방지에 적극 협력, 7월중 개성에서 실무접촉 개최
6. 경제·자원개발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 문제 협의(7월중 개성 실무접촉 개최)
7. ‘경공업 및 지하자원협력 합의서’ 발효 시점에 경제시찰단 상호 교환
8. 문서교환방식으로 △수산업협력 실무협의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상사중재위·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공동위원회 명단교환 및 회의 일정 협의
9. 9월중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최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요지

1.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제공, 북측은 지하자원 생산물, 개발권, 생산물 처분권 등으로 대가를 상환  
경공업 원자재의 품목, 수량, 수송 경로 등은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2. 남측은 2006년에 미화 8천만 달러 분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2006년 중 대가의 3%를 아연괴, 마그네슘크링카 등으로 상환  
잔여분은 5년 거치 후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하여 상환
3. 경공업 원자재와 상환물자의 가격은 해당 시기의 국제시장가격 또는 쌍방이 합의 하는 가격
4. 북측은 전문가들의 현장방문, 기술지원,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운행과 기타 편의를 보장
5. 남과 북은 아연, 마그네슘크링카 등 광산들에 공동으로 투자  
투자광산 선정, 사업성 평가, 협력방식과 생산물 처분 등은 쌍방의 이행기구 사이에 협의, 확정
6. 북측은 합의되는 협력대상의 광물 탐사 자료, 굴진, 채광, 선광 등 설비자료,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자료를 비롯한 필요한 자료를 보장
7. 북측은 현지 공동조사, 투자효과성 평가, 시설설치와 기술지원, 기반시설, 출입 및 체류, 신변안전, 수송수단의 안전 운행 등 보장
8. 남과 북은 합의서 발효 1개월 이내에 이행기구를 지정하여 통보

## 2.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 가.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와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 협의회 제5차 회의를 통해 합의된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 문제 협의를 위해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2006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남북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개통식 문제, 추가 자재·장비 지원 문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 징구, 시험운행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개통식은 이미 남북간 수차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부원)

레 합의된 사항인 만큼, 행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것과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에 규정된 자재·장비 사용내역서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도로 개통식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입장과 의지는 변함이 없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일정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우리측에 자재·장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3회, 대표접촉 2회 등 6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였으나, 열차시험운행 및 철도·도로 개통식 문제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나.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과 제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남북은 2006년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열차시험운행과 철도개통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열차시험운행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홍광표(건설교통부 팀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량기건(민족경제협력연합회 책임부원)

을 5월 25일 실시, 철도·도로 개통식을 6월 14일 개최, 철도·도로 운영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 마련, 철도·도로 자재장비 사용 내역서 통보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열차시험운행 및 궤도검측차 운행과 관련한 우리측의 입장을 수용하는 등 한단계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철도개통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2회, 수석대표접촉 3회, 비공식 수석대표면담 1회 등 총

#### 합의서 요지

1.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 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시험운행을 5월 25일 진행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 1에 따르며, 열차 시험운행 행사와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들은 빠른 시일 안에 문서로 협의, 확정
  - 남과 북은 열차시험운행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간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구간 자기측 지역에서 각기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시험운행전 1-2시간에 앞서 북측구간에서 남측 궤도검측차에 의한 공동점검을 진행
2.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 ① 남측은 북측의 경의선 및 동해선 역사건축 마무리 및 개성역 배수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재를 본 합의서 부록 2와 같이 제공  
제공된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2002.9.19) 『첨부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
  - ② 북측 철도연결구간에서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차량장비 기술지원이 계속 진행되도록 협력
  - ③ 북측은 남측이 제공한 철도·도로 연결 공사용 자재·장비 사용내역을 빠른 시일 내 남측에 통보
3.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 운영을 위한 통신망을 구성하며, 열차 운영을 위한 열차운영주파수는 155.9250MHz로, 작업용 주파수는 155.9625MHz로 하기로 한다.
4. 빠른 시일 안에 차량운행사무소를 소규모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점차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
5.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 명단을 빠른 시일안에 교환하고, 합의되는 날짜에 제1차 회의를 진행

6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입장을 조율하고 총 5개항의 합의서에 가서명하였으며,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추후 문서로 협의·확정하기로 하였다.

### 3.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년 6월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고경빈(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박철수(개성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대 표	박 철(통일부 팀장) 서명교(건설교통부 팀장)	한명철(민족화해협의회 경제담당 부원) 류창만(중앙특구지도총국 3차장)

쌍방은 출입증 제도의 실시 등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용수·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건설문제를 중심으로 협의하였다. 북한은 우리측이 제시한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노동력 공급문제는 개성시 외부로부터의 인력조달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과 편의시설의 건설을 남한측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출입증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고, 연중 상시통행보장을 위해 양측 출입사무소(CIQ)를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

을 요구하였다. 또한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환전소 설치·운영과 통근열차 운행과 개성공단 방문 확대, 기반시설 건설 협조 등도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노력·공동해결 원칙’을 제시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2회 등 총 3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남과 북은 200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제2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접촉에서 쌍방은 개성공단건설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출입증제의 조속한 실시를 비롯한 통행·통관 절차의 간소화,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 개성공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숙소·편의시설 건설문제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6년 6월 21일  
개 성

#### 4.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을 2006년 6월27일부터 28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은 2005년에 실시한 단독조사결과 검토,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 실시방안, 홍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세부대책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이 전달해 온 단독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공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원인희(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고상복(기상수문국 부국장)
대 표	김기혁(통일부 과장)	김태이(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동조사 실시계획을 조속히 협의·확정하며,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수피해 방지대책과 임진강유역 댐 및 임남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 황강댐·구룡댐 건설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측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북한은 홍수통보체계 수립과 산림조성사업이 임진강유역 수해방지대책의 근본문제라고 주장하고, 산림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묘목 제공방안과 수량을 우선 협의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단독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제공한 것이며, 공동조사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면 시행할 수 있고, 홍수예보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남한측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댐 방류계획의 사전통보에 대해서는 북한 지역의 댐들이 모두 ‘무넘이 언제’ (수문이 없는 댐)들이므로 현재로서는 통보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4회, 전문가접촉 1회, 대표접촉 2회 등 총 8차례의 접촉을 통해 협의하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으며,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제5절 인도·사회문화 분야 회담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끝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도 남북은 북한의 수해 복구지원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인도분야에서의 남북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갔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과 2차 레에 걸친 2008 북경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 1.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우리측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6년 1월 12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을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1월 16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개최할 것을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부위원장)
대 표	유종렬(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동 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생사주소 확인, 화상상봉·대면상봉행사의 정례화,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사업 확대 실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우리측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제6차 적십자회담 및 장관급회담(제15차~제17차)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도로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빠른 시일내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태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하자는 반응을 보였으나, 그동안 부인해 오던 전쟁이후 시기 행방불명자의 문제를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진전된 태도를 보였다.

우편물 교환 및 생사·주소확인 정례화 문제는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산가족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쌍방은 6.15 계기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과 6.15 및 8.15 계기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설치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설비자재 등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6.15 공동선언 발표 6주년을 맞아 이산가족 금강산 특별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200명씩) 진행
2. 6.15와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특별 화상상봉(규모는 남북이 각각 60가족씩) 진행
3.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폭넓게 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계속 협의
4. 이산가족 문제에 전쟁시기 및 그 이후 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확인문제를 포함시켜 협의·해결
5. 남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는 데 필요한 설비자금 등을 북측에 제공(이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3월중 개최)
6.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은 6월경에 금강산에서 개최

## 2.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은 2006년 3월 8일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면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실무접촉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 왔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남북은 지난 제7차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측의 화상상봉센터 준비와 이산가족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자재를 북한측에 제공하는 문제 등 인도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회담기간을 연장하여 3월 22일까지 실무접촉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대 표	황정주(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양측은 이산가족사업 확대에 필요한 차량 및 물품구입비용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물품구입 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화상상봉센터 설비자재 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측은 설비자재의 구체적 사용내역 확인과 더불어 우리측 인원의 현장방문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북한은 현장방문을 구두로 약속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6.15 계기 상봉은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생사확인 후보자 수가 적을 경우 상봉하지 못하는 가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후보자 수를 확대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고, 북한측은 세부일정 등에 대해서 판문점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쌍방간에 이견이 가장 컸던 분야는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로서 우리측은 화상상봉센터 준비에 필요한 자재설비를 지원하는 만큼 5월부터 월 1회 화상상봉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화상상봉 정례화 문제는 실무접촉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대응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이후 남북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6월 13일 까지 화상상봉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지원문제를 협의하였다.

### 3. 대북수해복구 지원 관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2006년 8월 14일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지난 7월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수해 복구자재·장비, 응급구호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개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8월 17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2006년 8월 1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동 실무접촉은 북측의 미사일발사(7.5) 이후 개최된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끝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인도적 지원문제 협의를 통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했다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임용훈 (대한적십자사 남북국제본부장)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김남중(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송혜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황정무(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양측은 실무접촉을 통해 쌀 10만톤, 복구자재·장비 등 지원품목 및 규모에 대해 대체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였다.

분배현장 방문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복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분배지역을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복구 후 방문을 주장하다가, 우리측 제안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수해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쌀 등의 지원품목이 조속한 시일내 전달되기를 희망하였으며,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한 전달을 요청해 왔다. 이로써 남북은 북한의 수해규모, 지원품목 및 규모, 전달시기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을 마무리하고 별도의 합의서 체결없이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우리측은 실무접촉결과를 토대로 북한측의 수해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해복구 지원품목과 규모를 결정하고, 8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수해복구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은 쌀 10만톤, 시멘트·철근·덤프트럭 등 복구자재 및 장비, 모포,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및 기타 의약품 등이었다.

대북 수해지원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전까지 쌀 89,500톤, 시멘트 29,585톤, 철근 3,800톤, 트럭 5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모포 2만장, 긴급구호 세트 1만개, 의약품 등 약 522억원 상당 이루어졌으나, 북한 핵실험으로 전달 예정이었던 물품에 대한 지원이 보류되었다.

#### 4. 제3차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2005년 중 두 차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05.9.7, '05.11.22)시 합의한 바대로 안중근의사 순국기념일(3.26)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남북한 공동조사 일정 등을 협의할 필요에 따라 우리측은 2006년 3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3차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3월 10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3월 2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최완근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이성원(통일부 과장) 김영란(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우리측은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에서 북측에 1986년 중국 현지 답사시 확보한 자료 및 추가 확보자료가 있으면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2005년 11월 14일에 전달한 자료 외에는 더 이상 넘겨줄 자료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2005년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자료수집 조사단이 일본 현지에서 확보한 안중근의사 유해 매장관련 추가자료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우리 측은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남북 공동조사단을 3월 중 구성, 판문점을 통해 명단을 교환하고 4월중 중국 현지답사를 실시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은 공동조사단 구성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의 사항은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으로 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공동조사단 구성 및 현지답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4월중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4차 남북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정세 등을 이유로 실무접촉은 어렵다고 언급하며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방식을 주장하였다.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제3차 남북실무접촉에서 합의서를 채택하지 못했으나, 양측은 큰 틀에서 이견없이 이번 실무접촉의 의의 및 사업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 보도자료 요지

1. 남과 북은 2006년 3월 20일 개성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관한 제3차 실무접촉을 진행하였음.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남측이 제공한 일본현지조사 자료를 상호 검토한 후 위치확인을 위해서는 현지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음.
3. 남과 북은 현지조사를 위한 공동조사단의 구성, 조사방법, 조사시기에 대해 4월중 판문점을 통하여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하였음.
4. 또한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와 관련한 세부적인 추가자료들을 정리하는대로 계속적으로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음.

## 5.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 가.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

2006년 4월 13일 우리 측이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4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북한이 2006년 6월 16일 남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6월 29일 개성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우리측이 동의함으로써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이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담에 참여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안민석(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이성원(통일부 팀장) 오영우(문광부 팀장)	정해만(내각 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 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 체육지도위) 정금철(민화협 참사) 이영국(조평통 서기국 부원)

남북은 상호입장을 제시하고 이견사항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선수단 명칭, 단기, 단가, 공동훈련, 공동위원회 설치, 단일팀 선포식 등에서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핵심사항인 선수선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선수선발원칙에 대해 공개선발전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일방만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연맹 랭킹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북한은 집단경기(축구, 배구 등)는 선수선발 전 없이 5:5 동수로 선발하고, 개별 및 기록경기는 자격경기전(예선전 등)에서 개별적으로 참가하여 자격을 획득한 남북 선수 모두를 참가시키는 이중적 선발원칙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남북간 경기력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종목이 있음을 설명하고 5:5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있는 선발원칙”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단일팀 출전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시기적으로 촉박한 일정과 자체 선수훈련이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불가하다고 주장하여 협의되지 못함으로써 2006년 도하아시아경기대회는 각각 참가하게 되었다.

남과 북은 이견을 보인 선수선발 문제 등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회담을 7월 중순 금강산에 진행하기로 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차 체육회담을 마무리하였다.

#### 나.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

2006년 11월 10일 북한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5회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카타르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을 진행할 것을 제의해 왔다. 아울러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을 제의하면서 실무문제들은 현지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측 제의를 수용하면서 11월 27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회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양측 수석대표를 NOC위원장으로 격상할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3차 체육회담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게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 대표	김정길(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문재덕(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대 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이성원(통일부 팀장) 오영우(문광부 팀장)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정해만(내각 체육지도위 부국장) 박일남(내각 체육지도위 책임부원) 박천일(내각 체육지도위)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참사)

우리측은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의 대표단을, 북한측은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대표단을 각각 구성하였다.

남과 북은 2006년 11월 29일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연락관 접촉을 통해 회담일정에 합의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3차 체육회담을 진행하였다. 양측은 단일팀 구성의 핵심 쟁점사항인 선수선발 원칙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세부 선발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측은 경기력 우선 선발이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우수선수로 단일팀을 구성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단일팀의 중요한 의미임을 강조하고, IOC 등 국제기구에서 엔트리를 확대할 경우 남북간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명하였다. 북한은 객관적인 평가 및 선발기준이 부족하며, 남과 북 전체인민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5대5 동수선발 원칙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세부적인 선수선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은 우리측 입장에 대해 진전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최종 합의서 체결에는 응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양측은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대표 간에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 계속 협의하고 제4차 체육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3차 체육회담을 종결하였다.

한편, 11월 30일 전체회의 개최전 실무접촉을 갖고 제15차 도하아시아경기대회 남북선수단 개·폐막식 공동입장과 단일기 독도표기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국제경기대회에서 통산 8번째로 공동입장하였다.